광주시의회 예산 편법 처리 '인턴보좌관제' 어떻게 되나

市 "집행 불가" 의회 "재의 없으면 유효"

市, 묘안없어 행자부에 처리방안 검토 요청

재의 요구땐 의원들 '보복성 예산 삭감' 예상

광주시의회가 유급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려 했던 계획이 박광태 광주시장의 동의 불가 입장에 따라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15일 편법 강행 처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선 이같은 일은 사상 초유의 일로 현재로선 누구도 효력여부를 판단내리지 못하고있다. 광주시가 이날 바로 행정자치부에 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 요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각종 법의 근거를 들며 광주시 등에서는 유급인턴보좌관제 예산은 비합법적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강행 처리한 시의원 상당수는 광주시의회에서 재의(再議)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은 합법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한 만큼 이제 공은 시 집행부 측으로 넘어간 상태다. 예산안 처리가 잘못됐다며 박 시장이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의를 요구할 경우 = 박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시의회는 다시 예산안 심의에 응해야 한다. 통과된 예산안이'단체장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 시의회가 고의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예결위를 다시 열어 '보복성 예산 삭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광주시의회가 재의를 해서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받아들이기 힘들긴 하지만 박 시장이 의회와 원만한 관계 설정을 위해 '동의'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 하지만 2주후면 내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간적 이유 때문에, 또는 증액 예산만 집행하지 않기 위한 의도적 이유 때문에 박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일부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장이 15일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동의'를 사실상 취소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안이 합법화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은 시의원들도 이같은 시간상의 촉박함을 염두에 두고 온갖 비난을 무릅쓴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광주시 집행부 측 대다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처리된 내년 예산안 중 인턴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된 증액 부분만 불법이고 나머지는 합법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즉, 단체장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증액된 부분이나 새 비목(費目)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아무런 하자 없이 집행할 수 있고 증액 부분은 예산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분명한 법 위반 행위"라며 "박광태 광주시장은 관련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유급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의 증액에 반대를 표시한 직후 광주시의회 진선기(왼쪽) 운영위원장과 손재홍 의원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장기공석 헌재소장 후보자

금주중 지명 될 듯

노대통령 인선 채비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인해 장기간 공석상태에 있는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이번주 중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번주 중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프로세스(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마냥 후보자 인선 및 지명 작업을 늦출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전효숙 후보자 지명 당시 제기됐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절차상 논란을 없앤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번주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후보 지명 시점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관련법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헌재소장 후보자를 선(先) 지명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이강국(사시 8회), 손지열(사시 9회·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 대법관과 이공현(사시 13회), 조대현(사시 17회) 재판관 등 전직 대법관과 현직 재판관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헌재소장 후보자가 선임되면 지난 8월 22일 전효숙 헌재 재판관에 대한 헌재 소장 동의안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한나라당의 단상점거 등에 의해 헌재소장이 공백사태가 된지 무려 4달여만에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끝나게된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 인준 투표가 저지되고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초래됨에 따라 지달 27일 전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 자체를 철회했었다. /연합뉴스

회고 2006

3 5·31지방선거, 민선4기출범

'대선 길목' 중앙정치 대리전 '매니페스토 운동' 성과 없어

5·31 지방선거는 당초 10년을 갓 넘긴 민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단계를 넘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느냐를 가늠할 전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선을 1년6개월여 앞두고 치러지는데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失政)에 따른 민심 이반 심화로 '정계개편'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해갔다.

성난 민심 집권당 외면

개표 결과는 예상대로 선거 사상 최악의 집권당 참패였다. '성난 민심'은 여당을 외면했고 한나라당의 싹쓸이로 이어졌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 기초단체장 5곳 모두를 석권, 2004년 총선 이후 4연승을 거두며 당 재건의 발판을 구축했다.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10곳, 열린우리당 5곳, 무소속 7곳으로 3분됐다. 현직들이 줄줄이 낙선하고 무소속은 대거 약진했다.

선거운동 역시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주요 정당들은 당원과 주민이 직접 참가하는 상향식 공천을 목표로 삼고 시민배심원제 등을 도입했으나 형식에 그쳐 중앙정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과 '돈선거' '조직선거'의 악습 또한 되풀이됐다.

처음으로 시도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외면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참공약, 헛공약' 등 후보자별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선거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채 '정책선거' 가능성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돈·조직선거 악습 되풀이

5·31 지방선거는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광역·기초의회에도 '민주당 독점'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잉태했다. 기초단체장의 55.6%, 광역의원 의석의 91.4%, 기초의원은 64.3%를 거머쥔 민주당이 지방행정과 의정을 모두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광주·전남 29개 지방의회 의장단도 90% 이상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로 인한 권력다툼이나 파행 운영도 적지 않았다.

'1당 독식'이나 다름없는 이같은 구도는 풀뿌리 민주의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진단됐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여지가 오히려 크게 줄어 자치단체의 비리나 예산낭비, 권한 오·남용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진 것이다.

주민 소환제 등 도입 시급

이같은 우려속에 지난 7월 1일 출범한 민선 4기는 초반부터 극심한 선거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당선자 410명의 10%가 넘는 4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고길호 신안군수와 전형준 화순군수의 중도 하차로 10·25 재·보선까지 치러야 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공백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안겨졌다.

일선 시·군·구에서는 선거를 둘러싼 논공행상과 파행인사가 되풀이돼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새 단체장 입맛에 따라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왔던 시책들이 무더기로 중단 또는 재검토되면서 인력·예산 낭비 논란이 벌어졌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유급제 첫 해 무리하게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다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 유권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주민소환제와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전횡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도된 '매니페스토(공약 검증)운동'은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참여 부진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4월 24일 광주시선관위와 5·31 지방선거광주전남연대 주최로 열린 매니페스토 토론회. 〈광주일보자료사진〉